

광주시·전남도, 국비 확보·핵심 현안 해결 ‘총력전’

市 ‘국비상황실’ 가동…매일 국회 활동
姜시장, NPU컴퓨팅센터 등 지원 요청
金지사, 민주 원내대표·예결위원장 면담
의대 2027년 개교·김산업진흥원 등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2026년도 광주시 핵심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이자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빛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2026년도 광주시 핵심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혁명 발원지 옛 5·18묘역 민주공원 조성,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이달 초부터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간사실,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고 주요 국비 사업 필요성과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광주에 가져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 핵심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6년 국비 증액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고 확보 활동은 2026년 예산심사와 주요 법률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뤄졌다.

김 지사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2027학년도 정원 배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해양,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역할을 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며 "이는 전남만의 성과가 아닌 대한민국 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남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에서 총결실 논의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731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130억원) 등 핵심 SOC 사업을 비롯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 마스터 플랜 수립,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전남도 5·18기념관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 등을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을 교육·생태·체험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다"며 "섬 방문의 해 추진을 통해 체류형 관광과 섬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기조에 맞춰 전남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재차 요청했다.

전남도는 주요 현안의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 광주·전남 정치권 ‘한목소리’

공동결의문 발표 최적의 입지 강조

공정·명확한 평가…엄정 절차 촉구

광주·전남 정치권이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전남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과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한목소리로 유치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지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항엽 국회의원들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노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나주는 안정적 부지여건, 우수한 정주환경, 한국전력·한국에너지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시 국회의원들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공단 등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구축은 진정한 국가균형성장과 과학기술진흥의 출발점”이라며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되도록 전남·광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

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구시설 조기 구축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주의 타월성이 공정·명확하게 평가·반영돼야 한다”며 엄정한 절차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이날 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

보를 통한 숙원사업 해결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투자와 설비를 확대하는 만큼 나주는 관련 R&D와 연관 산업을 집적할 최적의 입지로서 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과기부 장관이 전남의 유치 노력에 감명을 받았고 후속 대규모 국가연구시설의 전남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도 “정부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태양광,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전남을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만들 대단히 좋은 기회”라며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뜻을 전했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위원장은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RE100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률이 국회 산자위 안전으로 올라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지역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재정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627명 공개
체납액 광주 116억·전남 142억

체납처분·행정제재 등 징수 강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6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 283명, 전남 344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116억원, 142억원이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광주 지방세 명단 공개자 288명(법인 117명·개인 131명)의 체납액은 10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 35명(법인 13명·개인 22명)의 체납액은 13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116억원 규모다.

전남 명단 공개자 283명 중 개인은 129명으로 체납액은 42억원, 법인은 134개 80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81명 중 개인 75명 19억원, 법인 6개 1억원이다.

광주시·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여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약사입니다

11월 18일, 약의 날

시민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의약품은 건강을 지키는 힘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시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약지도, 다제약물 관리, 불량의약품 신고, 폐의약품 수거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치료의 도구입니다. 약사와의 상담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약, 올바른 복용, 올바른 건강 약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KPA 광주광역시약사회

